

광주도시공사 가등급 ‘최고’ 전남개발공사 마등급 ‘낙제’



광주도시공사

부채 줄이고 매출 늘려
안정적 재무구조 확립
조직 혁신정책 실시
대내외 경쟁력 강화



전남개발공사

땅끝호텔·오동재 적자
산업단지 분양도 저조
오룡지구 개발 관련
검찰 수사도 영향

행정자치부 공기업 평가

광주도시공사가 행정자치부 공기업 평가에서 높은 매출과 낮은 부채비율,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함 점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단 3곳만 가등급을 받았다. 특히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가등급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반면 전남개발공사는 마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오룡지구 개발과 관련한 비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8일 공사 56곳,공단 79곳,상수도 114곳,하수도 86곳 등 334개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결과를 공개했다. 7개 유형별로 4개 분야 30여개 세부지표로 분석한 경영평가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우수한 재무성과를 거뒀다. 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사원 채용에 투입한 점도 높이 평가받아 대구·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가등급이 매겨졌다.

광주도시공사의 3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배경에는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유동성 강화를 위한 재고자산 매각 TF팀 운영을 통한 2723억원의 매출액 달성, 전년 대비 23%이상 부채비율 하락에 따른 낮은 부채비율(195.73%) 유지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

립한 점이 큰 힘이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이외에도 상위직인 1·2급을 24명에서 18명으로 축소하고 결재단계도 축소하는 등 조직 혁신정책을 실시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 획득 등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전남개발공사는 인천·강원개발공사와 함께 가장 낮은 최악의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땅끝호텔, 한옥호텔 오동재 등 관광 관련 사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다 장흥·강진에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률 역시 저조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검찰이 오룡지구 개발과 관련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기소한 것도 이 같은 평가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가등급을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사장의 경우 301~400%, 임원 201~300%, 직원 230~250%의 성과급을 받는 반면 마등급을 받은 전남개발공사는 사장 및 임원의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 삭감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반가워요 유커” 정부가 28일 사실상 메르스 증식을 선언함에 따라 국내 관광업계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오후 베이징발 항공기 탑승자들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2의 메르스 막으려면 방역·의료체계 확 바뀌어야

정부, 메르스 사실상 종료 선언

정부가 28일 일상 생활 복귀를 권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두달 넘게 끌어온 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메르스 사태는 우리 정부의 방역체계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병원이 얼마나 감염병에 전문인지 쉬운 곳인지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만큼 방역·의료 체계에서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우선 감염병을 관리하고 통제할 정부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태 초반 방역이 허술했던 이유가 보건복지부 산하조직인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통제를 맡겼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대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든지, 아니면 본부 자체를 별도의 청이나 처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출신 인력과 역학조사관 인력 풀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지역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감염전문가가 본부 운영을 받아 감염병 발생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감염병 초기 발생시 관련 질병정보의 발생 및 전파상황,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했고, 방역 당국이 상당한 신뢰를 잃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여기에도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수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중관리병원 15개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간 새 환자가 전혀 없었으며,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혜자 등 광주·전남 의원들

공무원 100명 이상 법제화

정부의 지방 통행식 시행령 개정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 갑)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에 나섰다. 〈관련기사 2면〉

박 의원은 28일 아특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에는 이윤석·주승용·장병완·강기정·이개호·김동철·임내현·박지원·권은희·김성곤·황주홍·김영록·박주선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제출한 아특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문화전당장의 직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단장을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문화전당 지원과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박혜자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이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정부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운영인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규모를 크게 축소할 시 행령을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해 국회 입법권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문화전당 등의 직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를 열어 문화전당의 운영조직 등을 구성하는 내용의 문화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현행 4개과 40명에서 1개과 8명으로 축소하고, 문화전당 직제와 정원(1전당장 및 4과, 정원 50명(계약직 공무원 18명 포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